

“송하진 지사, 전북 갈등 적극 중재해야”

도의회 김종철 의원 5분 발언 “공공갈등 조정 방안,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답해달라” 촉구

“전북지역 갈등사안, 전북도의 문제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국민의당, 전주 7)은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렇게 운을 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도내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사안에 대해서 전북도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지난달 27일 전북도와 국회의원 간 정책협의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전주항공대대 이전 문제를 비롯해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옥정호 개발 등을 놓고 벌어진 지자체간 갈등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왜 송 지사는 공공갈등을 방관자로서 모습만 보이고 있는냐”고 촉구했다.



임시회 마지막 현안질문답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5회 임시회 폐회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최인정 의원의 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만 하고 있다면 전북에 산재한 갈등 구조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지사의 역할은 갈등의 방관자도 갈등의 조정자도 아닌 갈등의 중재자여야 한다. 전북의 갈등문제, 잠재된 공공갈등 사안에 대해 전북지사로서 조정 방안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서도 “도는 갈등사안을 좀더 민주적이고 합리적 과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고자 지난 2007년 갈등조정협의회를 창설했고 지금의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이르렀다”면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갈등 사안 7건에 대한 회의가 2014년 전무, 2015년 단 2차례 개최 등 회

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나”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항공대대 이전문제는 이미 원칙이나 기준을 넘어 지역주민의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사업이다. 갈등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이자 전북도의 문제인 만큼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하고,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운천 새누리 도당 위원장 취임식

내일 대한건설협회 도회 두나미스홀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가진다

고 지난 22일 밝혔다.

취임식은 오는 26일 10시 30분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6층 두나미스홀에서 진행된다.

전북도당은 “32년간의 긴 지역주의 정박을 깨고 원내 집권당으로서 전북발전 100년을 책임지기 위한 힘찬 전진을 시작한다”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안호영 의원, 수리시설개보수 신규 지정 협조 요청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무진장지사를 방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전주완주임실지사 2개지구, 무진장지사 4개지구)의 신규지구 지정 협조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지역농업인 현안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 안전한 영농이 실현되도록 시설물 관리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3당, 5·18왜곡행위 처벌 입법 한목소리

야3당 대표들은 2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토론회에서 “최근 정부가 합법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제반법률을 개정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절차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세력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다시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18을 폄하하는 일부 사람들로 국민통합이 저해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서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결정했다. 내가 대표발의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우리 야당이 당론으로 함께 발의해서 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5월 정신은 자랑스러운 현대사인데 일부 세력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불순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많은 대다수 국민이 5월 영전에 감사와 헌사로 뜻을 모을 때 국회 일부 인사가 여론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3당이 공조해서 이번엔야말로 민주사회에 대한 5·18 영령들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목적과 방향 상실한 의미없는 추경”

“국회심사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조선·해운업 부실경영 책임 추궁”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내용을 비판하며 국회 심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조선·해운업 부실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추경안 평가 보도자료에서 “2016년도 제1차 추경안은 추경을 왜 했는지, 추경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등 추경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의미 없는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은 당겨쓰기 추경에 다름 아니다”라며 “추경 11조원 중 4조 9,000억원은 추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내년도에 정산되는 몫이며 급변 추경은 정산을 미리 앞당긴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채무 상황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 9조7,000억원 중 정부의 직접사업 예산은 4조6,000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 금융성 사업에 치중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던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내국세 증액 경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20.27%(1조9,000억원)가 이전됨으로써 누리과정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나 1조9,000억원은 추경이 없더라도 내국세 초과수입에 따라 당연히 내년에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교육재정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를 통해 올해 미연성된 누리과정 예

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분담 원칙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산은·수운에 대한 재정출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세금 1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부실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총 11조원의 추경 중 정부의 직접사업예산은 단 4조6,000억원에 불과하며 이중 3조5,000억원이 금융성 사업에 치중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약속한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청년실업 해결의 근본적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면죄부를 주고 조선업에 특혜를 주는 면죄부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이번 추경이 유의미하도록 조선업 부실경영 사태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예산 중 2,000억원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유지와 이직을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다. 현재 실업자를 위해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안 중 실질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8만개로 이를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불과하며 그 규모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진안군

시원한 여름 휴가

진안고원에서 느껴보세요

마이선의 여울

문일원반원암

백문동계곡

문정길계곡

제8회 동향면 수박축제

2016. 8. 6(토) ~ 8. 7(일) 2일간

진안군 동향면 동향체련공원